

2019. 12.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03-10

20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성주인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정도채 부연구위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김용욱 부연구위원

민경찬 연구위원

정유리 연구위원

김민석 연구위원

나현수 연구위원

하혜지 연구위원

정희라 연구조원



목차

CONTENTS

Chapter I

일반 현황 / 1

Chapter II

2019년 주요 업무 내용 / 13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 1.1.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15
-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33

2. 조사·연구 업무

-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47
- 2.2. 삶의 질 심층연구 60
 - 2.2.1. 농어촌 지역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구축 61
 - 2.2.2. 농어촌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63
 - 2.2.3. 농업인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 방안 65
 - 2.2.4. 농촌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 정책 방안 66



2.2.5. 다문화 가정 포용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전략	69
2.2.6. 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강화	71
2.2.7.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형 교통모델 개선 방안	73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75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87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91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93
3.4.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지원	97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¹⁾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이다.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²⁾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과 활동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관련 시책을 종합하여 수립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³⁾의 수립·변경 심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 조정을 담당한다.

1) 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 한다.

2)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 한다.

3)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5. 4.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09.12.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0.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2.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4.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 2014.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5. 6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 실적 및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발표
- 2015. 7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
- 2016.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 2016.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1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등 심의
- 2020.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심의 예정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의 환경 및 주민의 정책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인다.
 - 정책 추진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정책 성과의 확산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심층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DB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그 외에도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 ↘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2015년 ~ 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 ↘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15, 2016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및 주민 만족도 조사

- 2016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6년 12월 23일)
- ↘ **2017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17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 2017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7개 부문) 실시
 -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2017 농어촌의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17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7년 12월 13일)
- ↘ **2018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7개 부문)
 -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실시
 -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8년 12월 19일)
- ↘ **2019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실시
 - 2019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실시
 -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19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19년 7월 2일)
 -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지원(2019년 9월 24일~26일)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개요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기본계획'의 제5장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근거를 두고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조직으로 2015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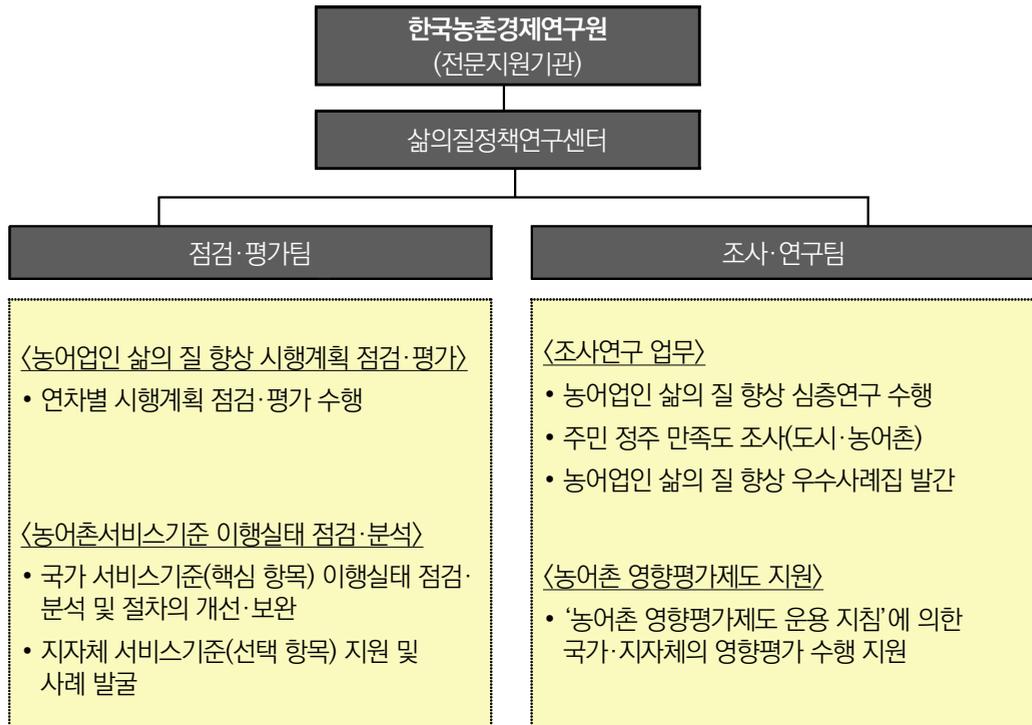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을 '삶의질정책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 주요 업무 및 조직구성

-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 평가 등 특별법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기본계획 기간 중 연차별로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 등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서비스기준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에 대해 부문별 세부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이와 연계된 지역 정책을 발굴하고, 지자체별 선택 항목의 제도화를 점검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정책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인지적 관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 (정책 지원 네트워크 운영)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심층연구 수행, 정책 과제 발굴 등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 경험과 성과를 확산시킨다.

- (기타 지원 업무)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삶의 질 이야기 포스터 발간 등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점검·평가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II



2019





1. 정책 점검 · 평가 입무

1.1.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1.1.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개요

- 2004년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기본계획은 농어촌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의 위상을 갖는다.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기본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별 계획의 지침이 된다.
 -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여건 개선, 도농교류 확대, 지역개발 촉진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시책을 망라한다.
 -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⁴⁾ 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총리 주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

* 이 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보고서 참고.

4) 국무조정실(총괄), 농림축산식품부(간사),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1개 부처·청



쳐 최종 확정하고, 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 금년은 제3차 기본계획('15~'19) 종료 시점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농어촌의 향후 전망에 기초하여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해이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철학을 반영하고 자치분권과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에도 대비해야 한다.

○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전문지원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연구(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를 진행하였다.

- 정책 분과별로 연구진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방향, 전략 등을 도출하였다.

- 기본 방향 도출을 위해 농어촌 지역 간 격차와 정책 수요를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기존 제3차 기본계획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1~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기간	2005~2009	2010~2014	2015~2019
추진 배경	한·칠레 FTA 체결 농업·농촌 종합대책 (농업경쟁력 강화 + 소득증대 + 정주여건 개선)	포괄보조금 도입, 기초생활권 정책 재편 등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
주요 내용	농촌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기초생활인프라 및 복지 기반, 경제활동 다각화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맞춤형 체감복지 확충,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7대 부문 185개 과제)
투융자 규모	(계획) 20.3조원	(계획) 34.5조 원	(계획) 46.5조 원
참여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5개 부처
특징	H/W 중심의 중앙정부, 공급자 관점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등 선진 제도 신규 도입	부처들의 관심 부족으로 정책 조성 성과 미흡

❖ 농어촌 여건 진단 및 제3차 기본계획 평가

□ 농어촌 정주여건 변화

- 최근 농어촌에는 인구 증가 등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귀농·귀촌 증가에 따라 2015년 이후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증가 추세로 전환했고, 전국 대비 농어촌 인구 비중도 2010년 18.0%에서 2018년 18.8%로 증가했다.
 - 국민의식조사 결과 농어촌 이주를 준비 중인 도시민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201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간 편차는 존재하며 도시와 비교한 삶의 질 격차 또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어촌의 활성화 역량이 취약해지면서 미래 농어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 도시 근교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좋은 읍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농업 의존도가 높거나 원격지에 위치할수록 인구 과소화 추세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도·농간 소득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40년에는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56.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일수록 도농복합시 대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는 등 농어촌 지역 내 서비스 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국가최소기준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취약지역(시·군)이 공간적으로 고착되면서, 농어촌 지역 내 삶의 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 향후 중앙정부 재정사업의 지방이양 확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단이 축소될 전망이며, 지자체 차원의 추진 기반 여부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편차도 커질 전망이다.
- 한편,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농촌 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 2019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식량 생산 이외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역할(환경보전, 여가 공간 및 문화유산 보전, 경관 보전 등)이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40대 이상 연령층은 농어촌에서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
- 시장 기능이 약한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의 자발적 연대·협동에 기초해 해결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증가하고 그들의 활동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도·농 주민 만족도 격차가 감소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기본계획 7대 부문 중 보건·복지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비교 가능한 농어촌서비스기준 15개 핵심 항목 중 9개 항목(60%)의 달성도가 개선되었다.
- 그러나 농어업인에 편중된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데 미흡하였고, 농어촌 관련 부처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범부처 정책의 성격은 약화되었다.
 - 2019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과제(168개) 중에 정책 대상자가 명확한 과제는 총 50개로서, 이중 농어업인 대상 과제가 46%를 차지하였다.
 - 또한 제1~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중앙 부처별 예산은 농식품부 비중이 점차 증가한 반면, 타 부처 예산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필수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불충분하고 정책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과정이 미흡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 사업 또한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1~3차 기본계획 기간마다 점검·평가 방식을 개선하였으나 정책 환류의 문제는 상존하였다.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점검·조정 및 정책 환류 수단으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작동하지 못하

였다.

- 지방분권에 대응한 지역 단위 추진기반 구축에도 한계를 보였다.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단위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꾀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했고,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지자체 단위 기획단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 농어촌 여건 및 정책 동향 변화와 제3차 기본계획의 평가를 토대로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 (정책 목표) 농어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농 격차 해소에서 벗어나 지역·정책 대상별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도록 정책 목표를 전환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 내 삶의 질 격차를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필수적 서비스를 중점 지원한다.
 - 농어촌 인구 구조·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책 대상) 농어업인 중심에서 다양한 세대·계층을 포용한다.
 -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어·귀촌인, 다문화 가정, 도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을 발굴·추진한다.
- (정책 범위) 농식품부·해수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소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각 부처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 및 이행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기한다.
 - 구체적 실행 기준 미비 등으로 당초 의도한 취지 달성에 한계를 보였던 농어촌 영향평가 등 제도적 장치들의 운영을 정상화한다.
- (정책 거버넌스) 개별 사업,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플랫폼, 중앙과 지방, 민관의 협치 중심으로 삶의 질 정책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자율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삶의 질 향상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목표	생활 인프라 및 소득의 도·농 간 격차 완화	농어촌 지역 내 격차 해소, 다변화되는 정책 수요 대응
대상	농어업인 중심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계층 포용
범위	농식품부, 해수부 정책 중심	관련 소 부처 협업 추진체계 내실화
거버 넌스	단위 사업별 관리 중앙정부 주도	통합적 지원을 위한 플랫폼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의 협치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농정 철학을 반영하여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비전을 설정한다.
 -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 보장: 도·농간 격차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한다.
 -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국민의 가치관 변화, 기술 발전 등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및 체류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한다.
-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을 3대 목표로 삼고, 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추진한다.
 -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고령화·과소화 심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

- 요에 대응하고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한다.
 - (교육·문화 지원)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의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 (경제활력 증진)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취·창업을 활성화 한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한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 지역 주도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를 목표로 추진기반을 개선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모니터링·성과평가 등의 내실화를 위해 핵심 항목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항목을 신설한다.
 - (이행 관리 수단 제도화)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단들을 내실화한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추진기반〉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에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 	
전략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 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 ④ 주민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개선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주민 창업 촉진 ④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추진 기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한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 지역 주도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부문별 추진과제

□ 보건·복지 부문

- 제3차 기본계획까지 의료취약지 해소, 돌봄 시설 확충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접근성 개선, 돌봄 시설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왔으나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보다 능동적인 종합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 부문의 중요도에 비해 낮은 주민 만족도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 부문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도시에 비해 부족한 학원, 문화센터 등의 아동 보육 인프라와 농번기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와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4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등 농어촌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 농어촌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확산을 과제로 도출하였다.
 - 보육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육 서비스 기반 강화와 환경 개선을 과제로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작업 안전 보장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부문 주요 과제 및 성과지표〉

주요 과제	1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2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통합 돌봄 확산 	
	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4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보육·육아서비스 기반 강화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 사회보험 지원 강화 • 고령·취약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성과 지표	성과목표	2020	2024
성과 지표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주민건강센터 확충	110개소	250개소
	- 분만 취약지 지원 건수 (잠재 분만 취약지 포함)	39개소	45개소
	-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대상	2.5천 명	204천 명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 농어촌형 돌봄 제공 시설 조성	2개소	6개소	
- 돌봄활동 추진 사회적 농업 운영 농장 지원	2개소	10개소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 농촌 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 지원	49개소	70개소	
-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25개소	50개소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 농지연금 가입 건수	16천 건	32천 건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65%	75%	

□ 교육·문화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고 농어촌의 전반적인 문화·여가 접근성과 여건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농어촌의 교육 여건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며 주민 만족도 또한 도시에 비해 크게 낮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는 여전히 저조하며,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복원·확산은 미흡했다.
 -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지역자원 연계형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기반과 접근성이 여전히 열악한 실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 연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 문화·여가 기반시설이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다수 존재하므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개발, 인적 기반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교육 부문에서는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농산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제공, 지역 내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교육 서비스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및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및 인적기반 구축을 통한 농어촌 문화·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소외지역의 문화·여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과제로 제시했다.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 육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다.



〈교육·문화 부문 주요 과제 및 성과지표〉

주요 과제	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2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 농산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제공 • 지역내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간 교육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3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	4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 향토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 	

성과 지표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지원 - 청년층 농어업분야 진출 장학금 지원	2,983대 815명	3,027대 1,050명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노인 문해교육 공동체 운영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20개소 1,680개	100개소 1,888개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 - 농어촌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 농어촌 지역 체육공간 지원 건수	30개소 100개소	150개소 120개소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건수[누적] -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 건수[누적]	40개소 5개소	200개소 50개소

□ 정주생활기반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농촌형 교통모델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정주공간 개선 및 농어촌 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농촌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여전히 존재하며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이 미비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 환경 조성 및 주민 자율적 경관 보전 활동이 부족하고 안전한 영농·영어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전 관련 범죄예방 활동 등이 미흡하였다.
 -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교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향후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 내 인구 유지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농어촌 환경·경관의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환경·경관 보전활동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을 목표로 4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 첨단 교통의 농어촌 도입,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
 -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을 바탕으로 농어촌 주거 여건과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한다.
 -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을 바탕으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 농어촌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개선,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등 환경·경관을 보전하여 농어촌다움을 실현한다.



<정주생활기반 부문 주요 과제 및 성과지표>

주요 과제	1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 • 첨단 교통의 농어촌 도입 •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	4	환경·경관 보전으로 농어촌다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 •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성과 지표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 대중교통 조정을 통한 기·종점간 연계 시스템 - 고령자 교통안전수칙 방문교육	217대 3,974개소	350대 4,454개소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 지역 시·군단위 하수도 보급률 -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 - 빈집 철거 건수	71% 1,350세대 8,000동	75% 5,400세대 10,000동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 - 고령자 복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구축 - 농어촌 복합서비스 거점 구축	20개소 16개소	60개소 56개소
	환경·경관 보전으로 농어촌다움 실현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구축 - 농어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800개소 25개소	1,600개소 40개소

□ 경제·일자리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농어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에 집중했으나 그 성과가 농촌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령화 및 과소화 현상으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푸드플랜 정책은 부서 간 협력 부족, 민간 참여 미흡, 유통 측면만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 및 다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 여성 및 다문화 인력의 역량강화 및 고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농어촌 관광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기반 또한 크게 확대되었으나, 인프라 부족과 콘텐츠 부재라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4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전략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를 제시했다.
 -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농어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요구된다.
 - 농어촌 주민 창업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 청년 및 귀농·귀촌인 창업 촉진, 농산어촌 신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전략으로는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및 고용지원, 귀농어·귀촌인 및 잠재적 농어촌 이주 대상자 취업 지원,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가 제시되었다.



<경제·일자리 부문 주요 과제 및 성과지표>

주요 과제	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2	농어촌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농어촌 관광 인프라 개선 	
	3	농어촌 주민 창업 촉진	4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 창업 촉진 농산어촌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및 고용지원 귀농어·귀촌인 및 잠재적 농어촌 이주 대상자 취업 지원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성과 지표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건수(누적)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90개소	130개소 전 시·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여행 일수 (1인 평균)	0.9일	2일
	농어촌 주민 창업 촉진 - 농산업 창업 교육 인원 (연간) -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육성	400명 150명	800명 450명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 진로 체험 농장 육성 - 농어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6개소 78개소	50개소 10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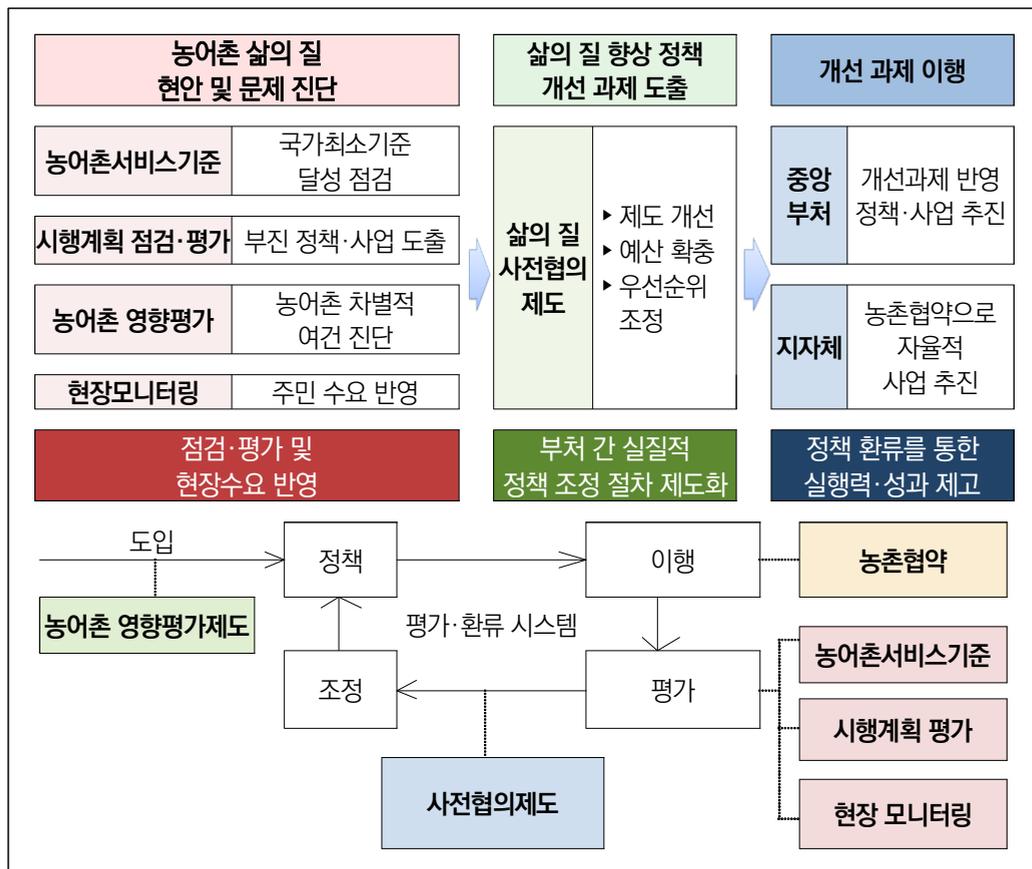
❖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 개선 방안

- 범정부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 SOC 확충 기조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 생활 SOC 시설 공급 기준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과의 정합성 및 농어촌의 현실·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완한다.
 - 공공의료, 공동돌봄, 공공체육 등 국가적 생활 SOC 확대 계획(생활 SOC 3개년 계획)을 고려하여 6개 항목을 신설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결과가 취약한 지역에 각종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유도한다.
- 현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 지침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훈령으로 공포·시행한다.
 -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범부처 조정이 필요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활용한 현장 수요 파악 등 공론화를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과제에 대해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운용지침'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로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훈령으로 공포·시행한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여 이행이 부진하거나 차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이행이 부진하거나 차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분과위에서 협의안을 도출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상반기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하여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 관계부처는 필요한 제도 개선(법 개정 등) 등을 이행하고, 검토 의견을 기재부에 제공하여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 지역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중앙·지방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협약을 도입하고, 시·도 및 시·군 농어촌 삶의 질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율적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 지자체가 국가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시,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 시·도 및 시·군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유도하며, 필요시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현장 단위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정책 개선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 피드백을 강화한다.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 개요

-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설정·관리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및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 및 목표치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담겨 있다.
 - 정부 부처, 전문가, 농업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설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 제3차 기본계획의 시작 시점인 2015년부터는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분석하고, 9개 시·도 연구원이 광역자치단체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분석하고 있다.
 - 2019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개정(‘20.8.28 시행 예정)으로 2020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의 국회보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 주요 추진 내용

▣ 2019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주요 내용

-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의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으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한다.
 - 핵심 항목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의 7개 부문,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시·군별 중기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 중기 목표치는 제3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은 통계청 승인 공표 통계, 각 부처 내부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29개)를 활용하여 점검·분석을 실시한다.
- 해당 자료는 자료 수집 기간 당시(2019년 9월~12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되, 5년 단위 공표 통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인 2015년 통계를 사용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통계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실	행정조사
	2) 응급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 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공식통계 공식통계 행정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행안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공식통계	
		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자료	
		지자체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행정조사	
3.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 현황	공식통계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 조사	공식통계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협조자료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4. 경제 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조사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통계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 (생활안전)	15) 방범 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행정조사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일 1회 이상 순찰 여부	경찰청: 범죄취약지역, 마을 별 순찰 횟수	협조자료
	17) 소방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 2019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와 노인 항목의 달성률이 상승하였다.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진료서비스가 상승 반전하였으며, 응급서비스 항목의 달성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항목은 '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달성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항목은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 교육 부문은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감소하였다.
 - 농어촌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둘 다 유지하고 있는 읍·면 비율은 69.8%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 대비 1.6%p 낮아진 13.8%로 집계되었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상수도, 난방 항목은 달성률이 전년에 이어 소폭 향상되었다.
 - 대중교통 항목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주 지표인 대중교통 운행 횟수의 경우 '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수치의 변동이 없다.
 - 주택, 광대역 통합망 항목은 조사방식의 변경, 관련 사업의 종료 등의 이유로 이행실태 점검이 불가능했다.
- 경제활동·일자리, 환경·경관 부문은 달성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문화·여가 부문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전년 대비 2.9%p 달성률이 상승하였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문화·여가 부문)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하수도 항목(환경·경관 부문)은 매년 꾸준히 달성률이 향상되었다.
- 안전 부문은 소방 출동 항목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 방범 설비 항목은 달성률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반면, 경

찰 순찰 항목은 여전히 이행실태 점검이 불가능하였다.

- 소방 출동 항목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벗어나 달성률의 개선을 이루었다.

○ 2018년 대비 2019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비교하여 달성률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총 17개 항목 중 향상된 항목 수는 9개, 하락 3개, 그리고 현상 유지 및 비교가 불가 항목은 5개로 나타났다.

〈2019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8	2019	'18-'19 증감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71.0	72.5	↗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99.4	99.5	↗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73.3	76.1	↗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69.0	67.9	↘
2. 교육	5) 초·중학교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 수단을 제공한다.	100	70.3	69.8	↘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20.4	18.8	↘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	-	X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72.9	75.8	↗
	9) 난방	읍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63.1	65.9	↗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	100	88.6	88.6	-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8	2019	'18-'19 증감
		서 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완료	완료	-
4. 경제 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73.2	76.1	↗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00	93.5	93.5	-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82.9	85.2	↗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 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53.6	57.1	↗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	-	X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18.8	42.2	↗

주: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변동이 없는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 항목별로 2019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의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항목별로 편차를 보인다.

-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19년에도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과 일부 항목(응급서비스, 진료서비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지역이 많지 않다.
- 영유아와 평생교육 2개 항목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이행실태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항목(상수도, 난방, 하수도 등)일지라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 도농복합시에 비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군 지역의 비율도 현저히 낮아 군 지역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핵심 항목 중기 목표치 달성 시·군 현황〉

부문	핵심 항목	군(82개)		도농복합시(56개)		전체 농어촌 시·군 (138개)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43	45	55	55	98	100
	2) 응급서비스	57	65	56	56	113	121
	3) 노인	20	22	8	11	28	33
	4) 영유아	30	29	31	28	61	57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11	12	9	9	20	21
	6) 평생교육	8	10	12	9	20	19
3. 정주생활기반	7) 주택	-	-	-	-	-	-
	8) 상수도	19	24	24	27	43	51
	9) 난방	15	16	25	26	40	42
	10) 대중교통	-	-	-	-	-	-
	11) 광대역통합망	-	-	-	-	-	-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53	54	48	51	101	105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74	74	55	55	129	129
6. 환경·경관	14) 하수도	9	10	31	32	40	42
7. 안전	15) 방범설비	42	44	15	17	57	61
	16) 경찰 순찰	-	-	-	-	-	-
	17) 소방 출동	0	11	0	18	0	29

주 1) 음영 표시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

2) 응급서비스의 경우 소방서가 입지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117개 시·군 대상).

3) 난방 항목은 읍 지역이 없는 3개 시·군(웅진군, 계룡시, 거제시)을 제외한 135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4) 주택, 경찰순찰 항목은 데이터 부재, 광대역 통합망은 관련 사업 종료로 점검 불가능함.



□ 지역별 이행실태 점검·분석

- 2019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역별 이행실태 점검·분석은 시·도에 속한 농어촌 시·군의 평균값을 전국 농어촌 시·군의 평균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과 초·중학교, 난방 항목의 보조 지표를 제외한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 경기도는 소방 출동 항목을 제외한 12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달성률이 높다.
 - 노인, 초·중학교, 평생교육 항목이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이행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강원도는 총 7개 항목에서 전국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미흡하다.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상수도, 난방,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소방출동 항목의 달성률이 전국 농어촌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보건복지 부문 진료서비스 항목의 달성률이 낮다.
 - 반면 노인, 교육 부문은 타 시·군보다 달성률이 높았다.
- 충청북도는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총 8개 항목에서 달성률이 높았다.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평생교육,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법설비, 소방 출동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충청남도는 6개 항목의 달성률이 전체 농어촌 시·군의 달성률보다 높다.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영유아,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방법, 소방 출동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전라북도는 총 8개 기준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도에 비해 이행실태가 미흡하다.
 - 초·중학교, 상수도,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방법설비, 소방출동 항목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달성률이 높은 수준이다.
- 전라남도는 총 10개 기준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달성률이 낮다.
 - 초·중학교, 상수도,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이행실태가 상대적

으로 저조하다.

- 경상북도는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미흡하다.
 - 특히, 진료서비스, 소방 출동 항목 출동의 달성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다.
- 경상남도는 총 8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달성률이 낮다.
 - 경상남도는 난방,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소방 출동 항목은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높았으며, 응급서비스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 제주도는 총 9개 기준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양호하다.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영유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소방 출동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노인,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이 전국 평균보다 달성률이 낮으며, 상수도 와 난방 항목은 매우 낮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대부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달성률이 높다.
 - 부산시 기장군은 노인과 초·중학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 소방 출동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평균 달성률이 높다.
 - 대구시 달성군은 방범 설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울산시 울주군은 노인, 방범설비와 소방 출동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달성률이 높다.
 - 반면 인천시(강화 응진군의 평균)의 경우 측정 가능한 전체 13개 항목 중 8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달성률이 낮다.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구분/ 종기 목표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진료 서비스 80%	응급 서비스 97%	노인 80%	영유아 80%	초·중학교/ (통학수단제공학교) 100%	평생 교육 40%	주택 95%	상수도 82%	난방/ (LPG저장탱크) 65%	대중 교통 100%	광대역 통합망 90%	
부산(기장)	100	99.8	73.9	100	60.0	-	60.0	100	91.0	-0.6	-	-
대구(달성)	100	99.9	119.1	100	100	-	44.4	100	89.9	-1.1	-	-
인천(강화옹진)	50.0	99.7	78.0	70.0	65.0	-	5.0	57.5	70.3	-0.9	-	-
울산(울주)	100	99.8	70.2	83.3	83.3	-	41.7	81.7	96.3	-0.2	-	-
경기도	93.3	99.7	78.0	95.7	77.7	-	37.4	85.4	84.1	-0.2	-	-
강원도	53.3	99.1	84.8	83.2	79.0	-	19.3	67.5	24.4	-0.3	-	-
충청북도	90.9	99.6	75.3	66.7	62.7	-	19.6	68.0	63.9	-0.3	-	-
충청남도	86.7	99.9	75.8	75.8	69.6	-	17.4	69.2	62.5	-0.3	-	-
전라북도	61.5	99.4	73.2	56.6	73.0	-	14.5	87.1	47.7	-0.2	-	-
전라남도	66.7	99.1	73.0	63.3	73.4	-	15.3	76.1	46.7	-0.2	-	-
경상북도	60.9	99.2	74.9	60.5	64.7	-	16.4	71.6	64.3	-0.2	-	-
경상남도	72.2	99.5	74.0	52.0	58.7	-	13.3	75.1	66.8	-0.2	-	-
제주도	100	99.8	74.9	100	100	-	41.7	37.9	0.0	-0.1	-	-
농어촌 시·군	72.5	99.5	76.1	67.9	69.8	-	18.8	75.8	65.9	(0.2)	88.6	-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계속)〉

구분	4. 경제활동·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100%		5. 문화·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00%		6. 환경·경관 하수도 85%		7. 안전 방범설비 60%		경찰 순찰 100%		소방 출동 55%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100%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00%	하수도 85%	하수도 85%	방범설비 60%	방범설비 60%	경찰 순찰 100%	경찰 순찰 100%	소방 출동 55%	소방 출동 55%
부산(기장)	100	100	0.0	0.0	90.1	90.1	100	100	-	-	36.0	36.0
대구(달성)	100	100	100	100	87.5	87.5	27.5	27.5	-	-	44.6	44.6
인천(강화옹진)	100	100	50.0	50.0	34.2	34.2	57.9	57.9	-	-	29.6	29.6
울산(울진)	100	100	100	100	96.1	96.1	25.3	25.3	-	-	37.1	37.1
경기도	100	100	100	100	89.1	89.1	60.6	60.6	-	-	25.3	25.3
강원도	73.3	73.3	93.3	93.3	85.8	85.8	53.1	53.1	-	-	34.1	34.1
충청북도	100	100	100	100	86.5	86.5	70.8	70.8	-	-	66.3	66.3
충청남도	100	100	93.3	93.3	78.0	78.0	61.1	61.1	-	-	64.7	64.7
전라북도	100	100	92.3	92.3	81.0	81.0	67.4	67.4	-	-	47.5	47.5
전라남도	23.8	23.8	90.5	90.5	76.3	76.3	46.5	46.5	-	-	43.5	43.5
경상북도	69.6	69.6	91.3	91.3	81.6	81.6	56.0	56.0	-	-	29.4	29.4
경상남도	72.2	72.2	100	100	90.6	90.6	51.4	51.4	-	-	53.0	53.0
제주도	50.0	50.0	100	100	92.4	92.4	59.9	59.9	-	-	47.3	47.3
농어촌 시·군	76.1	76.1	93.5	93.5	85.2	85.2	57.1	57.1	-	-	42.2	42.2



2. 조사·연구 입무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2. 삶의 질 심층연구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개요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한다.
- 2019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 위치를 파악하였다.
 - 둘째, 그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측정 척도가 동일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직전년도인 2014년과 동 계획의 마지막 년도인 2019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사이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 도·농 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현황 및 추이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와 방문 면접 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병행하였다.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총 3,063명이며, 그 중 도시 주민 응답자는 719명, 농어촌 주민 응답자는 2,344명이다.



○ 조사 항목

-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주 의향 등이다.
-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세부 항목 중 1개 항목은 수정하고 3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세분화했던 8개 문항은 이를 포괄하는 2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 각 만족도 항목은 정도에 따라 11점 척도(0~10점)로 답하게 함으로써, 작년도 조사 및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인 2014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를 용이하게 했다.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포괄적 의미의 삶의 만족도(행복감)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정도 및 가능성 인식 ○ 주관적 웰빙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제3차 기본계획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별로 3~6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3차 기본계획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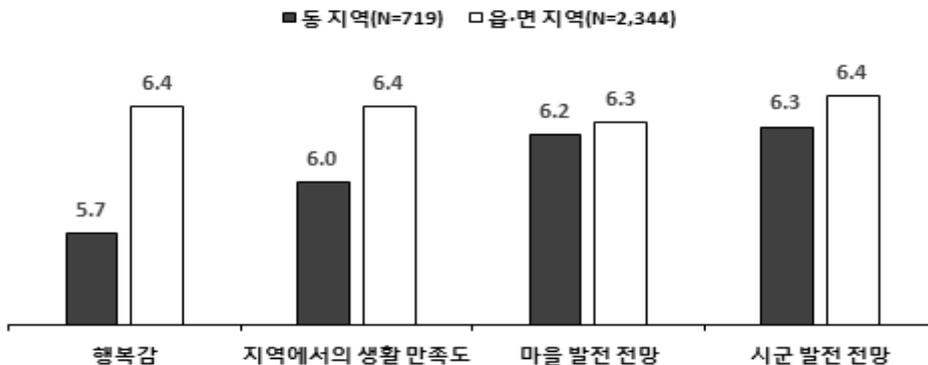
-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 주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 간 도·농 주민 만족도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상승했다기보다, 도시민의 만족도

가 꾸준히 하락한 결과이다.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값 상승폭보다 도시 지역의 하락폭이 더 크다.
- 현재 행복감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6.4점으로, 도시 주민의 5.7점에 비해 다소 높다. 이 항목은 최근 3년 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과 동일했거나, 더 높았다.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을 묻는 두 문항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올해 조사에서 도시 주민의 점수보다 높았다.
-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점수는 2017년 도시 주민이 농어촌 주민보다 0.6점 높았으나 이듬해인 2018년에는 0.3점으로 격차가 줄었고, 올해 조사에서는 오히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보다 0.1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시·군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2017년과 2018년 도시 주민이 농어촌 주민보다 각각 0.3점, 0.2점 앞서다가 올해에는 농어촌 주민이 0.1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 10점 만점)



**<도시·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도시 지역(동) (N=719)	6.2	5.9	5.7	6.3	6.1	6.0	6.7	6.5	6.2	6.8	6.5	6.3
농어촌 지역(읍·면) (N=2,344)	6.2	6.1	6.4	6.3	6.2	6.4	6.1	6.2	6.3	6.5	6.3	6.4
도·농 차이 (농촌-도시)	0.0	0.2	0.7	0.0	0.1	0.4	-0.6	-0.3	0.1	-0.3	-0.2	0.1

주: 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부여. 2018년 조사부터는 11점 척도(0~10점)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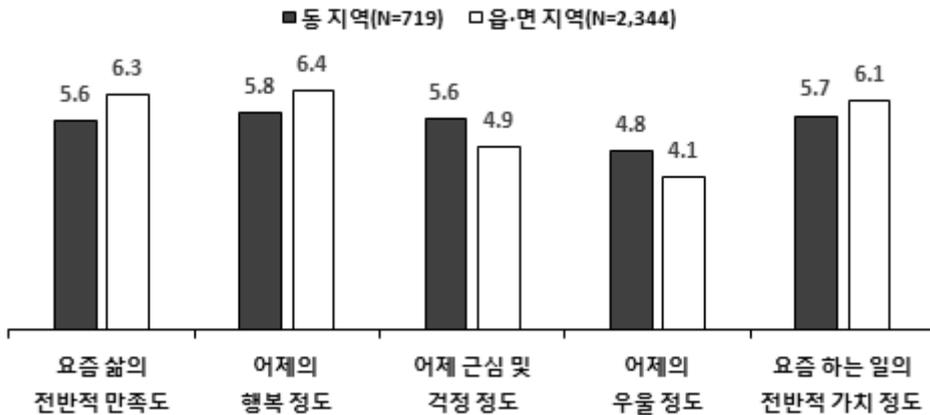
○ 주관적 웰빙 조사⁵⁾ 결과,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민에 비해 더 높다.

-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어제 행복 정도’, ‘요즘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정도’ 문항에 대해선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와 ‘어제 우울 정도’ 문항에선 작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도시 주민의 점수가 농어촌 주민에 비해 높다.
-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2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재산출한 후, 5개 문항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도시 주민은 5.3점, 농어촌 주민은 6.0점으로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주관적 웰빙 조사는 2017년부터 정주 만족도 조사에 도입되었는데, 농촌 주민의 주관적 판단으로 개인의 삶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 조사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의 ‘주관적 웰빙’과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지수를 산출한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평균 점수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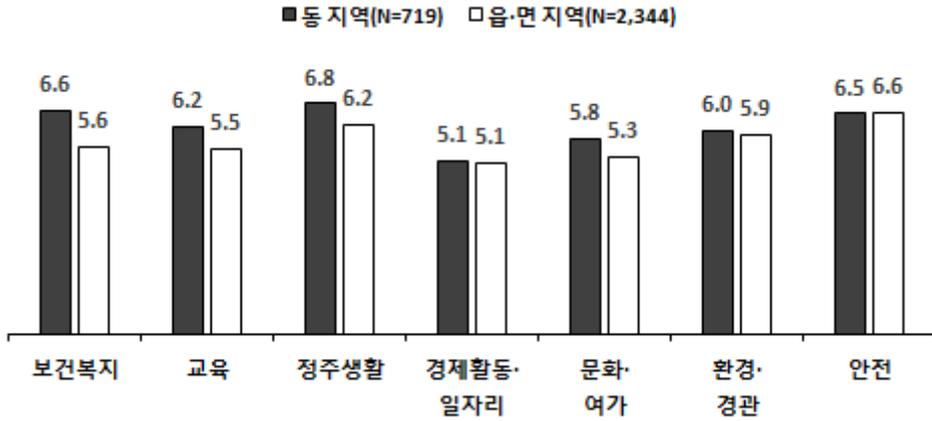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제3차 기본계획의 7대 부문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경제활동·일자리와 안전 부문을 제외한 다섯 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낮다.
 -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평균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상위 세 부문은 보건·복지(1.0점), 교육(0.7점), 정주생활기반(0.6점) 순이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6.6점) 부문이었으며, 이어서 정주생활기반(6.2점), 환경·경관(5.9점), 보건·복지(5.6점), 교육(5.5점), 문화·여가(5.3점), 경제활동·일자리(5.1점) 순이다.
 -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7개 부문 평균값인 5.7점보다 낮다.
 - 안전 부문의 만족도는 2018년에 비해 0.3점 상승하였으나,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오히려 0.1점 낮아졌다. 이를 제외한 다섯 부문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 10점 만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변화>

(단위: 점)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건·복지	5.9	6.0	6.0	6.2	6.1	6.1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6.4	5.6	5.6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6.5	5.6	5.6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5.9	5.6	5.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6.0	5.5	5.6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0	5.8	5.5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6.0	5.1	5.1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5.5	5.4	5.6	5.7	5.7	5.8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 세부 4개 문항 평균>
				5.5	5.7	5.7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3	5.2	5.5	5.3	5.4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	-	-	5.4	5.2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정주 생활 기반	6.5	6.4	6.6	6.6	6.6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2018년 - 세부 4개 문항 평균>
	5.8	6.1	6.3	6.3	6.3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6.1	6.0	6.4	6.2	6.1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7	5.8	6.0	5.7	5.7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	6.7	6.9	6.7	6.7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5.8	5.9	5.9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경제 활동 · 일자리	4.6	4.8	5.0	5.1	5.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9	4.9	5.3	5.2	5.1	최근 1년간(2018년부터 3년간으로 변경)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8	4.8	5.0	5.1	5.1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 체험 및 관광,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	-	-	5.1	5.0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5.0	-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4.8	4.8	5.1	5.4	5.3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6	4.5	4.8	5.3	5.1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	5.2	5.6	5.6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	-	-	5.1	5.1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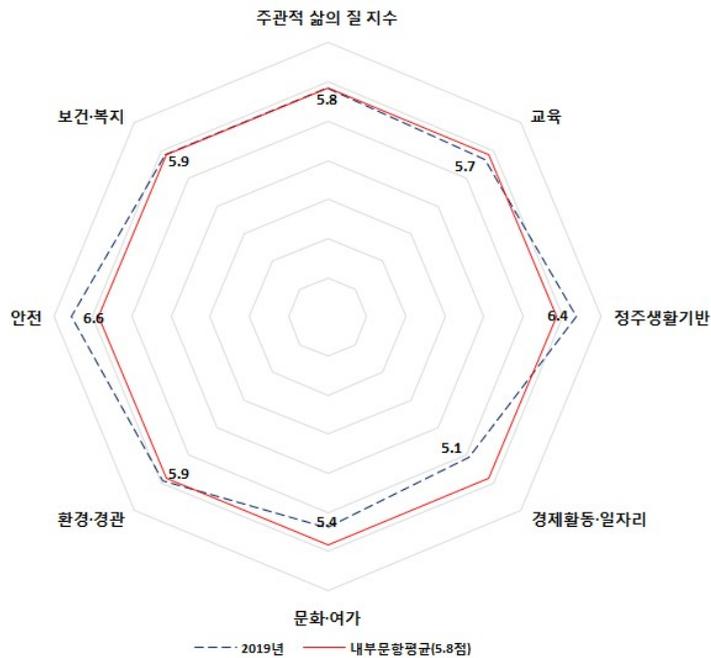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경 · 경관	5.9	6.3	5.8	6.2	5.9	6.3	6.3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0	5.8	5.1	5.9	5.3	5.9	5.6	5.4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산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4	6.2	6.2	5.9	6.0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6	6.7	6.5	6.7	6.6	6.8	6.6	6.8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6.3	6.4	6.5	6.3	6.3	6.6	6.3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6.8	7.0	7.0	6.3	6.3	6.6	6.7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6.5	6.4	6.6	6.7	6.3	6.3	6.6	-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5.9	6.2	6.1	6.3	6.3	6.6	6.3	6.3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	6.0	-	6.0	6.3	6.3	6.6	6.3	-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전체	5.6	5.6	5.8	5.7	5.7	(전체 평균)				

□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제3차 기본계획의 7대 부문 만족도 점수를 종합한 주관적 삶의 질 지수 5.8점보다 양호하게 나타난 부문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등 세 개 부문이다.

〈2019년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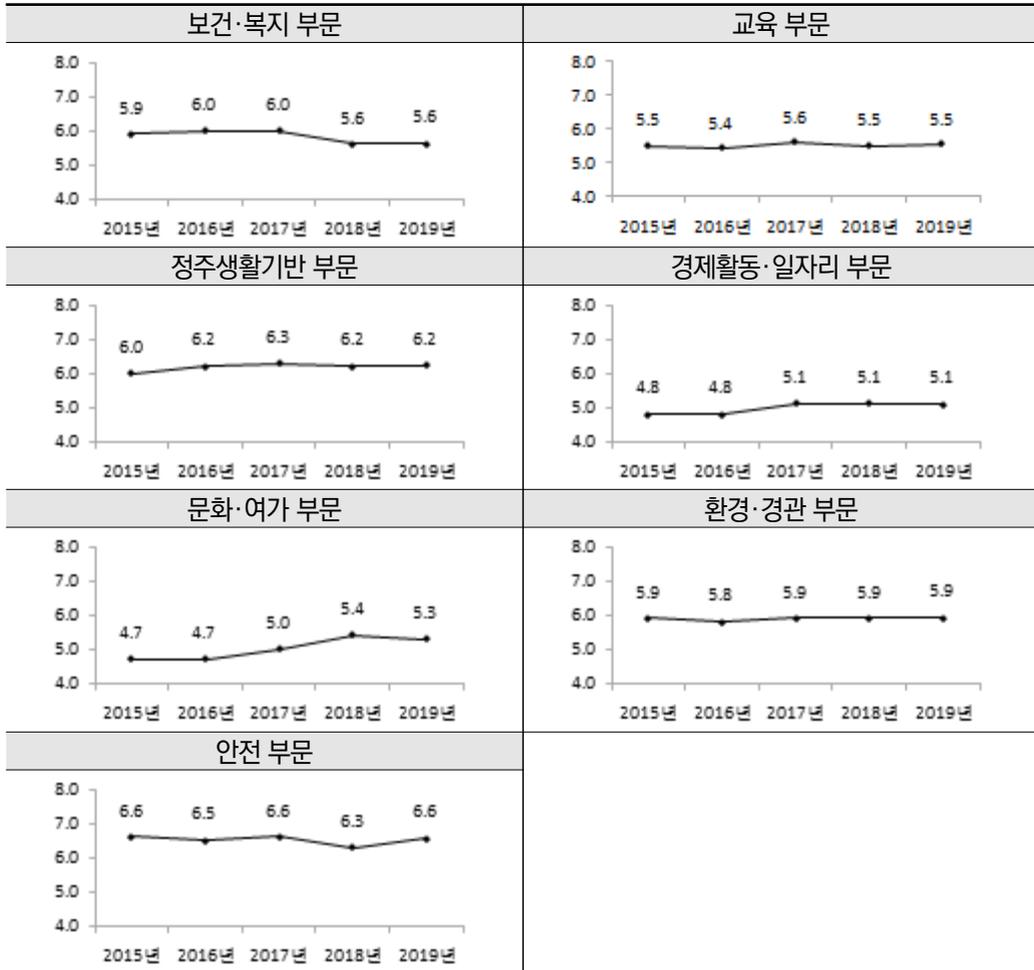


□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2015년~)

- 제3차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5년 사이 문화·여가 부문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0.6점 상승한 점이 가장 두드러지며,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도 소폭 상승하였다. 교육,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등락은 크지 않다.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 연도별 추이>



□ 소결 및 시사점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모든 문항에서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이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소폭 상승하고 도시 주민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하락한 결과다.
 - 주관적 웰빙의 조사 결과, 모든 문항에서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민보다 양호하게 나타난다.

- 제3차 기본계획 7대 부문별 만족도 점수의 도·농 격차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 경제활동·일자리와 안전 부문을 제외하고 다섯 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낮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부문이었으며, 이어서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경제활동·일자리 순이다.
 - 하지만 만족도 점수의 도·농 격차가 좁혀진 것은 도시 주민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하락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부문별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보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보건·복지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의 7대 부문 중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문이지만, 만족도 점수는 도시 주민에 비해 가장 떨어지는 부문이기도 하다.
 -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인은 상대적으로 여건 개선에 대한 체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불편이 크다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교육 여건의 도·농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이전인 2014년에 비해 ‘학교 교육 여건’과 ‘평생학습 기회’ 등 교육 부문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도시 주민의 만족도에 못 미치고 있다.
 - 교육 부문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교육 부문의 세 항목 중 가장 낮아, 부족한 교육 여건을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 ‘학교 교육 여건’과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젊은 연령층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해당 항목들에 대한 50대 이하 농어촌 주민



의 만족도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기회'에 대한 20~30대 주민의 만족도가 절반 점수에도 미치지 못해, 젊은 연령층 주민이 농어촌 지역에서 자기계발과 배움에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 인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 청장년층 주민의 교육 수요도 함께 파악하고 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3차 기본계획의 5개년 동안 측정된 정주생활기반 부문 중 '대중교통'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부문 내에서 가장 낮으며, 도시 지역과 만족도 점수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 또한 농어촌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요인 중 '교통이 불편하다'가 전체 응답 비율의 15.3%를 차지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가 교통 여건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 그럼에도 지난 5년 간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이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농어촌형 스마트 교통모델 개발 및 배후지와 중심지 연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다양한 소득원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경제활동 여건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7대 부문 중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다.
 - 20~30대 연령층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농림어업 비종사자의 만족도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주민 주도의 문화 공동체 기반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문화·여가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으나,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도·농 주민의 만족도 차이는 크다.
 - 두 항목에 대한 20~30대 주민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젊은 연령층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열악한 문화·여가 생활 여건을 극복하는 대안적 방향으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 주도의 문화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포용적인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연령대, 농림어업 종사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체감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귀농·귀촌인 집단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계층 및 집단에 따라 상이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삶의 질 도·농 격차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간, 농어촌 지역 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2.2. 삶의 질 심층연구

❖ 개요

- 심층연구는 국책 연구원 및 시·도 연구원으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전문 분야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제3차 기본계획 7개 부문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생활안전)에 대하여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제별 이슈에 대하여 통계 및 현장 자료를 활용해 농어촌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실증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2019년 심층연구는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러 전문가 및 국책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였다.

〈2019년 심층연구 내역〉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주제
전북연구원	이중섭	농어촌 지역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구축
성공회대학교	남일성	농어촌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연세대학교	고상백	농업인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황영모	농촌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다문화 가정 포용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강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욱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형 교통모델 개선방안

2.2.1. 농어촌 지역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구축

- (배경)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고령 노인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의 속도도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농어촌 지역 복지인프라 부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 농어촌 지역은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과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 (주요 내용)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만성질환 등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촌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회관 등의 인프라 재구축과 농어촌거점 통합복지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농어촌 지역 고령자 돌봄체계 쟁점 및 개선 방향〉

농어촌 고령 노인 돌봄 쟁점	농어촌 고령 노인 돌봄 현황	농어촌 고령 노인 돌봄 개선방안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독거노인 24.3% • 농어촌 장애인노인 26.3% • 돌봄 사각지대 최대 8.8%(17.9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통합 마을회관(경로당)운영 • 거점형 농어촌노인통합 돌봄센터 설치
수요단계별 정책차별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돌봄정책의 획일화 • 건강+독거 등 욕구단계별 정책 미흡 • 노인집단별 정책 우선순위 미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방문형 돌봄기관 신설 • 농어촌 노인 돌봄지원사업단 운영
돌봄 인프라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중심의 돌봄인프라 • 농어촌 지역 읍부중심의 복지기반 • 돌봄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복지 특별관리구역 지정 • 농어촌 이동복지관 운영

- (정책 제안)
 - 농어촌 지역 중 복지인프라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취약지역을 농어촌 복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의 다양한 돌봄정책을 집중 제공한다.
 - 1) 농어촌 복지 특별관리구역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돌봄 관련



- 시설이 부족한 지역(경로당, 마을회관 등) 그리고 과소화지역을 기준으로 중앙 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운영한다.
- 2) 농어촌 복지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매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 기준에 부합하는 복지 및 의료시설 우선 설치를 추진한다.
- 농어촌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방문 이용자 중심의 복지에서 탈피하여 노인 관련 각종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통합복지센터로 전환 운영한다.
 - 1) 상시 프로그램 관리 인력을 제외한 현재 노인복지관의 운영 인력의 일부를 노인 대상 사례관리 업무 및 지역 주민 조직과의 연계·조정 담당하는 역할로 전환한다.
 - 2)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복지관 중 농어촌거점 통합복지센터를 공모·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농어촌 복지자원 연계, 농어촌 노인 돌봄계획 수립,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 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농어촌 거점 통합복지센터의 사업비 지원(20% 지방비 부담)과 노인복지관 부설기구로 설치된 거점센터의 사무실 무상임대를 지원한다.
 - 독거노인은 건강 상태와 도움 제공자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돌봄 서비스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험도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농어촌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 다양한 단체(복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농어촌노인 통합 돌봄지원단을 읍면 및 마을 단위에 설치함으로써 통합복지지원망을 구축한다.
 -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농촌노인에게 중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규모가 큰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 1)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도움제공자도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응급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2) 병약하지만 도움제공자가 있는 독거노인은 경로당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생활 지도를 지원한다.
 - 3)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특화 경로당을 운영한다.
 - 4) 건강한 독거노인은 신체적 어려움보다는 고독감과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상호 지지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 과소화 마을 농어촌 노인 통합 DB를 구축하고 개인별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2.2. 농어촌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 (배경)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년기 건강문제가 사회이슈로 등장했으며,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노인들은 아프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치료하면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Aging in place).
 - 특히, 농어촌 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과소화 현상을 겪고 있어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건·의료·사회복지 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돌봄 활동 창출에 대한 정책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주요 내용) 농어촌의 인구 현황, 의료자원 인프라 현황, 복지 및 요양 자원 인프라 현황, 농어촌 특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부족, 농어촌 돌봄을 수행할 인력 부족 및 낮은 전문성, 농어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열악한 접근성, 치매 환자 돌봄에 부적합한 농어촌 환경, 농어촌 노인 사회 참여 부족, 돌봄 전달체계 및 정책 운영의 문제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맞춤형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이슈별 주요 문제점〉

부문	주요 내용
보건	농어촌 의료 시설 부족 농어촌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 낮음 교통수단 부족과 먼 이동거리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간의 접근성 문제
돌봄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부족 요양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정보 접근성 교통수단 부족과 먼 이동거리로 재가 방문의 어려움
커뮤니티	농어촌 인구의 과소화 대비 높은 수준의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문제
행정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와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 부재로 서비스 공급의 파편화 현상 예산이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원 사업의 연속성 부재

- (정책 제안)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돌봄 인력을 개선·양성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같은 중앙정부 유관 사업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농어촌 지역 자산을 활용하고 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산-기반형 생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1)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2) 돌봄 서포터즈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
 - 농어촌 노인 및 치매환자 등 취약한 돌봄 대상자들이 가정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농어촌 생활 돌봄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1) 지원을 통한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2) 농어촌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식·비공식 자원의 균형과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3) 마을공동체 주도형, 민간 중심 프로그램형,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형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2.2.3. 농업인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 방안

- (배경) 농업인의 경우 직업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어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도입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농업인들은 반복적이고 불편한 자세로 하는 작업이 많아 요통이나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육체활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간공학 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약, 농기계 사용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디젤엔진 연 소 물질, 각종 무기 및 유기분진에 노출되기 쉬우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및 자외선에 의한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농업인의 경우 특히 특정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 및 질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주요 내용) 보건의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도입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검진 항목 제시와 함께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검토도 이루어졌다.
 - 농업인의 경우에 일반 인구 집단보다 질병 유병율이 높게 나타나며, 검진 수검 률이 낮고, 연도별 증가 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이 낮은 요인으로 는 농업인의 거주지 특성으로 인해 검진기관까지의 접근성이 낮고, 검진 항목이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접근성 강화 및 검진 방법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주요 호발 질환 분석 및 질환별 검진 항목을 제시하였 다. 또한 검진대상 질환 및 질환별 검사법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하고, 농업인 특 수건강진단 실행을 위한 법·제도를 검토했다.
- (정책 제안) 전반적인 사업화 방안으로는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을 현실화하기 위 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농업인의 경우 낮은 접근성과 열악한 보건의로 환경으로 인하여 적정 또는 적기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지속적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 한



- 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농업안전보건센터의 기능 확대 또는 추후 검진을 시행할 현재 건강검진 기관들의 정도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농어업인 전체를 포괄하는 특수건강검진과 더불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한 여성 농어업인만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령들을 제시하였다.
 - 또한, 농업인의 건강 및 질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직업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농업인 친화적인 유관 인력 및 기관들과 연계를 유도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농업안전보건센터는 권역(지역) 내 농업안전보건사업 관리 협의체, 농작업성 질환 검진, 사후관리 및 감시 센터, 농업인 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농업인 및 농작업 유해 요인 평가 및 정보의 생성과 제공 기관, 농업인 및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홍보·훈련 제공 기관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2.2.4. 농촌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 정책 방안

- (배경) 국가의 공적부조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기준에 해당되지 못해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농촌 주민은 생활 SOC의 부족으로 생활상의 다양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 농촌 지역의 생활 SOC 부족은 농촌 주민이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정책과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생활 SOC 기반이 취약하고 대다수 주민이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이른바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 내용)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정책의 접근 방향과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농촌 생활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를 세분화 하고 서비스 주체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다.

- 귀농·귀촌자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사례를 통해 귀농·귀촌자의 역할과 기대수요를 파악한다.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대응전략 (종합)〉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자	일반 고령인, 다문화·귀농·귀촌인 등 농촌 주민
서 비 스	일상생활의 미충족 돌봄 수요 (장보기 대행, 말벗, 이동세탁, 농번기 공동급식, 물품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수단, 병원 동행, 주택관리, 직업훈련·취업 상담, 가전제품·휴대전화 이용방법, 이불빨래, 교통수단(버스·기차표)예매, 우편·택배 등)
인력 자격	자격기준 없음 (생활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 운전 등)
운영 주체	사회적경제·주민공동체 조직, 행정은 프로그램 운영·지원

- (정책 제안) 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 조직 방식: 농촌 지역에서 생활돌봄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청년(전담직원)의 고용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청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한다.
 - 주민공동체 조직 방식: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공동체 조직이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청년(전담직원)의 활동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청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한다.
 - 행정(읍·면) 방식: 생활경제권 단위로 기능하는 읍·면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에 농촌 주민(농촌마을, 주민공동체 조직)의 생활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청년을 담당 인력으로 채용하여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한다.



〈농촌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

구분	① 사회적경제 조직 방식	② 주민공동체 조직 방식	③ 행정조직(읍·면) 방식
사업 명칭	농촌 사회적경제 생활돌봄 청년일자리 사업	농촌 주민공동체 생활돌봄 청년일자리 사업	농촌 생활돌봄 수요 대응 지원사업
주요 목적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활돌봄 활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조직의 생활돌봄 활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	생활돌봄 서비스의 책임행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구상	주민대상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청년 고용 지원	주민대상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과 주민공동체 조직의 청년 채용 지원	읍·면사무소 생활돌봄 수요대응 담당인력 청년 채용 지원
대상 조직	법인, 사회적경제 조직	임의조직, 주민공동체 조직	(읍·면) 행정조직
서비스	농촌주민 대상 생활돌봄 비즈니스		생활돌봄 서비스 수요파악과 대응
지원 형태	직원 고용	활동 인력	담당 인력 (상근+비상근)
지원 내역	인건비 지원 총 3년(2+1) (연 2,400만 원)	인건비 지원 총 3년(2+1), 사업비 (1천만 원 이내)	
계약 관계	시·군-중간지원조직-활동 인력 계약	시·군-중간지원조직-활동 인력 계약	시·군(읍·면)-활동 인력 계약
사후 관리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점검·평가, 정착지원		
유사 사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전라북도)	'생활민원 기동반민원' (완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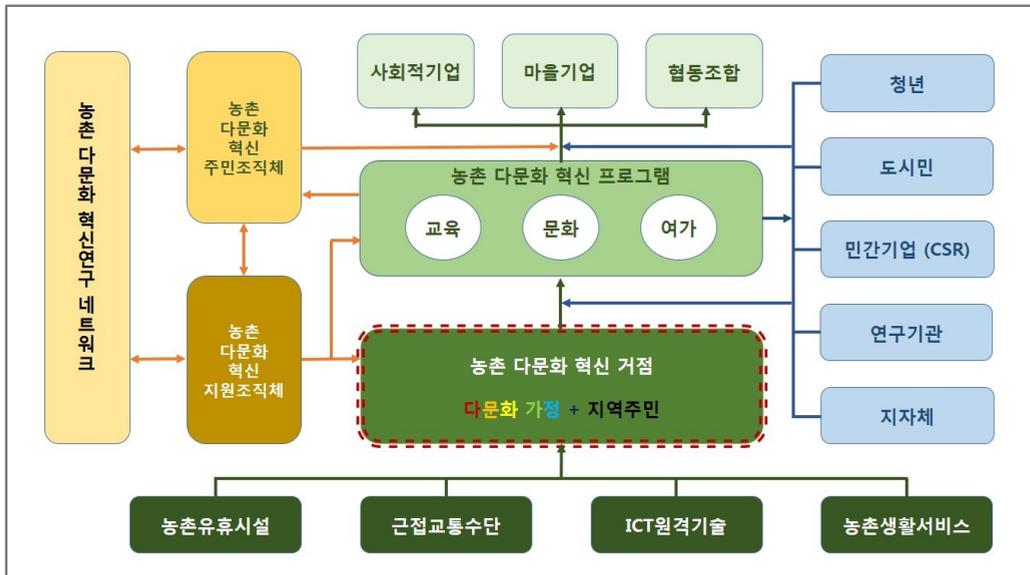
2.2.5. 다문화 가정 포용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전략

- (배경) 과거에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의 초기 적응 중심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이들이 장기 정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 여건을 반영하는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청소년기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영·유아, 취약계층의 다문화자녀 지원정책을 확장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 및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요구된다.
 - 지금까지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개별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주력하였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법·제도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주요 내용) 농촌 지역의 다문화 여건 변화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민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고려할 수 있는 사업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농촌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기초생활지원서비스(통역, 의료, 교육, 복지)를 제때 누리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을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IT기반시설 및 거점을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통과 정보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협의체 및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 심포지움, 세미나, 워크숍 등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정착 및 농업기술교육에 초점을 둔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업생산뿐 아니라 비생산 영역에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사회 내외에서 다문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참신한 중간조직을 육성하여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를 장려한다.
- (정책 제안)
 - ‘농촌 다문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농촌 다문화 가정이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과 소통하고 안정적인 기초생활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1) 농촌 지역 유희시설을 중심으로 30개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 2) 유희시설 재정비를 지원하고, 시설 활용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초소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ICT 기반시설 구축한다.
- ‘농촌 다문화 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 다문화 가정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주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 1) 30개 시범사업대상지 인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업참여 희망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2) 교육, 문화, 여가, 복지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지자체, 기업, 청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농촌 다문화 혁신 조직체 육성 및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30개 시범대상지에서 농촌 다문화 혁신거점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평가·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1)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 주민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2) 농촌 다문화 혁신거점 중간지원조직체, 주민조직체, 연구네트워크 등을 육성한다.

〈농촌 다문화 혁신 프로그램 사업 구상도〉



2.2.6. 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강화

○ (배경)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6년)이 제정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및 법적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 산업별 재해율(2015년) : 5.56%(어업) > 1.25(광업) > 0.90(농업)

- 어업 작업은 해상 작업, 반복 작업, 협소한 공간, 복잡한 기계·장비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 인력과 예산이 마련되지 못해 안전재해 예방에 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다.

- 안전재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전 예방적 접근체계 전환으로 어업인력 손실과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안전재해 사고 관련 통계를 활용한 체계적인 분석·연구·조사를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업방향 설정 및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재해 사고에 대한 어업인 스스로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방안을 강구하였다.

- 어업 작업 안전재해 위험요인 및 인과관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어선, 작업선, 운반선, 양식설비(가두리 등 양식장)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어업 작업 안전재해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어업 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 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국립수산물과학원, 일선 지자체는 어업현장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사, 연구,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재해 예방업무가 효과적으로 집행,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한다.

○ (정책 제안) 어업 작업 안전재해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 어업 작업 안전재해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1)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은 보험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적용하는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안전규정을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 어업 작업 안전재해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 1) 해양수산연수원, 수협, 시·도별 수산기술사무소 등에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기관의 교육 인프라와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현장방문교육,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2) 특히, 온라인 교육과정과 안전예방관리 지침, 장비개발 등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화면구성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어업 작업 개인 보호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를 개발 및 보급한다.
 - 1) 어업인들의 수요가 높은 어업용 헬멧, 어선어업 투망 시 추락방지용 벨트, 어업용 장갑 및 작업화, 어업용 작업복 등의 개인보호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 어업 현장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장비를 개발한다.
 - 1)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어업 장비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제고한다.
- 어업 재해에 대응하는 전문기관 및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1) 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 작업환경 개선 및 기술지도를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추진한다.
- 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포럼 및 어업 안전 엑스포를 추진한다.
 - 1) 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포럼은 창립준비 위원회를 통해 사전준비와 업계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한다.
 - 2) 어업 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어업용 기자재 산업 육성, 국제 네트워크 교류 등을 위한 행사를 추진한다.
 - 3) 어업 안전 엑스포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주최하고, 수산 분야 유관기관, 어업인 단체, 어업용 기자재 생산·기술업체 등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2.7.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형 교통모델 개선 방안

- (배경)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은 고령·영세 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읍·면 중심지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 농촌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도시와 만족도 격차가 커 농촌 주민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이주를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주 52시간제 시행(19.7월~)으로 버스운행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예상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인력 미확보로 기존 버스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지선구간에 위치한 마을은 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 (주요 내용) 택시 중심의 농촌형 교통모델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등에 따른 지역별 농어촌버스 운행시 추가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국내 주민 주도의 교통모델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다.
 - 교통 공백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 정착을 위해 복합적 사업 방식(운행 주체, 운행 수단, 운행 방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해외 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책 제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형)을 확대 지원하고, 운행 방식·운행 주체의 다양화,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와는 별도로 면 단위 농촌 교통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교통체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한다.
 - 교통 공백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체 육성 및 ‘교통서비스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 지역개발사업 연계 방향이 확산되도록 장려한다.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지역 농협 등이 교통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지침을 개편한다.
 - 1) 주민 조직 주체의 사업 추진 시 기존 국비 50% 지원 비율을 상향토록 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의 연계도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한다.

2) 버스형·택시형·주민 주도 및 지역개발 연계형 예산 비율을 제시하여 주민 주도 및 지역개발 연계형 사업 추진을 의무화한다.

- 지역 맞춤형 교통모델 보급을 위한 농식품부·국토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일반 농촌, 도시 근교 농촌, 산간·도서 지역 등 지역 특성 및 운영 주체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한다.
- 농촌형 교통모델 운용을 위한 권장 전산 시스템을 제공한다. 전산시스템 미구축 지자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을 권장하고, 콜·배차·정산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보급한다.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배경) 2015년부터 발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은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고, 농어촌 주민·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 2019년 사례집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 정주생활, 농촌 일자리, 문화·여가, 청년, 교육을 주제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굴·소개하였다.
- (대상 사례) 농촌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농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17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홍보 방안) 사례집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포스터(농촌 삶의 질 이야기)를 통해 각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 주요 내용

□ 자연 속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자라는 '장흥 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놀이터어린이집'

- 농촌의 열악한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군(郡)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 (배경) 장흥군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하 귀농·귀촌인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보육 여건이 문제되었다.
 - (주요 내용) 부모가 각각 조합원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절기학습'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공동체 정신과 자립심을 길러주고, 공동작업과 공부모임 등을 통해 아이뿐 아니라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 (키워드) 공동육아, 보육
- 농촌의 보육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어린이집은 부모 커뮤니티 역할을 겸하면서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 사회적농업에서 찾다 ‘교남 어유지동산’

- 농촌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자본을 형성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실천으로서 사회적농업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 (배경) 일반사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독립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 재배-농산물 가공-숙박의 6차 산업 일자리를 마련하여 자립과 자활을 도와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 (키워드) 사회적농업, 직업 재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사회적경제
- 34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의 판매 대행과 일손을 겸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우리마을 주치의,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다 ‘홍성 우리마을의료생활협동조합’

-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연대의 경험과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촌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극복한 사례이다.
 - (배경) 면 단위의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낀 주민들이 직접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 (주요 내용)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의료사업부에서는 의료 및 검진 활동, 조합사업부는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마을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 (키워드)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 돌봄 서비스
- 농촌 주민들의 일상적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상호 돌봄 역할 수행과 농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 농촌 과소화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 ‘무주 공동체활성화지원단’

- 전라북도 과소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무주군 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며 지역과 밀착된 면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배경) 2017년 전라북도 내 인구 과소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에서 단장과 청년 10여명이 지자체 사업을 기획하였다.
 - (주요 내용) 지역 내 여성, 청소년을 주요 타겟층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맘카페, 장터 활성화, 산촌캠핑, 프리마켓, 마을 조사 등)하였으며, 사회적농업, 교육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의 행정 사업 위탁 업무도 수행하였다.
 - (키워드) 마을활동가, 청년, 중간지원조직, 과소화대응인력육성사업
- 지역의 청년들을 마을활동가로 육성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과소화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의 선순환체계 확립 ‘제주 차롱치유밥상’

- 제주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 (배경) 2016년 서귀포 치유의 숲이 개장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 (주요 내용) 치유의 숲에서 진행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숲길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이 ‘마을힐링해설사’로 활동하며, 제주 전통문화자원인 차롱을 활용한 향토음식 도시락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 (키워드) 경제 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 차롱치유밥상, 서귀포 치유의 숲
- 일일 평균 60여 개의 도시락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마을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가 증대되고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차롱) 가치가 상승하였다.



□ 고한18번가 골목의 변화 ‘강원도 정선군 마을호텔’

- 폐광 지역 주민들이 폐허와 같던 골목길을 정비하고 가꾸며, 마을 내 민박, 식당, 카페 등을 연계한 ‘마을호텔’을 기획하여 농촌마을가꾸기를 시도한 사례이다.
 - (배경) 고한읍 출신의 사무국장과 「강원도 폐광지역 창업프로젝트」에 선정된 청년들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에 정착하고 마을가꾸기를 시작하였다.
 - (주요 내용) 골목가꾸기부터 시작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비로 2018년 총 4개의 빈집과 7채의 노후주택의 경관을 개선하고, 현재는 마을호텔 1호점 개장을 위해 마을호텔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 (키워드) 마을가꾸기, 마을호텔, 마을공동체, 지역재생, 농촌관광
- 침체되어 있던 골목길이 지역재생을 넘어 마을호텔로 추진되면서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지가 상승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멀티 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단순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배경) 산악 지형 등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1차 농산물 판매 비중이 높은데 기인한 낮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가공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 (주요 내용) 농산품 상품개발 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등 창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창업 사무실 및 시제품 제작 공간 및 기기 지원, 온라인 유통망 영농조합 법인 설립 및 공동 판로 개척 등 주민 경영체들의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 (키워드) 농산물 가공, 창업, 일자리 창출
- 최근 4년간 정선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약 130여 곳이며 38곳의 업체가 입주하여 57종의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18년 기준 약 1,002백만 원의 매출 성과를 내었다.

□ 소외를 극복한 교류의 장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 2011년 귀농·귀촌인들이 모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역 농산물 꾸러미 판매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 (배경) 다문화 이주 여성을 포함하여 이주민과 원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 (주요 내용) 다문화 이주 여성을 문화예술 교육 강사로 육성하고,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 꾸러미 판매, 함께 음식을 만드는 공유 주방과 야호문화나눔센터를 운영한다.
 - (키워드) 영농조합법인,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교육 강사, 꾸러미 판매
- 다문화 이주 여성이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서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 귀농·귀촌인과 공동체를 이뤄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 주민이 만들어가는 작지만 특별한 문화 공간 ‘상주 모동작은도서관’

-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도서관이자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한 사례이다.
 - (배경) 경북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는 젊은 층의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하지만 지역 내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 (주요 내용) 옛 모동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6년 작은 도서관을 개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이 어우러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
 - (키워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문화복지사업
- 폐시설을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재생한 성공적 사례로 농촌 공동체 속에서 세대 간 다양한 계층들을 서로 연결하여, 돕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제공한다.



□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 2017년부터 마을신문 제작, 라디오 녹음, 영화상영 등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여 이주민과 원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지원하는 사례이다.
 - (배경) 서울에서 방송관련 일을 하던 부부가 제주도로 이주하여 살면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소통 방법을 고민하였다.
 - (주요 내용) ‘찾아가는 영화관’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운영, 이 외에도 동아리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등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 (키워드)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마을만들기
-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미디어·마을문화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여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예술가들이 농촌에 색채를 더하다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 경남 하동군을 중심으로 귀촌한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을 알리기 위한 관광, 출판 상품과 미술체험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례이다.
 - (배경) 하동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하동 지역 및 차(茶)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분위기도 침체되었다.
 - (주요 내용) 지리산에 정착한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 내 어르신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체험교육, 공공미술(벽화 등) 기획, 지리산 다원을 배경으로 다원 순례 프로그램 운영, 지리산과 섬진강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한다.
 - (키워드) 농촌관광, 공공미술, 평생교육
-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상 연령을 다양화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다원예술 순례 프로그램 참여로 수익 창출과 함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

□ 기반 없는 청년 농부들의 빛이 되어주다 '청송해뜨는 농장'

- 일찍이 귀농한 부부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멘토'로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한국형 사회적 농업 시범농장이다.
 - (배경)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지을 땅, 돈, 무연고 등 기반이 없는 청년층들은 농촌에 정착하기 쉽지 않으며, 농업활동을 경험하기 위한 교육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 (주요 내용) 일찍이 지역에 귀농·귀촌한 부부와 조력자들이 귀농 멘토를 자처하여 청년들에게 농사 교육을 시작하였다. 청년들이 농장에서 작물의 성장, 재배, 수확, 판매, 유통에 대한 실습 및 농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청년농부
- 한국형 사회적 농업 시범농장으로서 농가와 청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품으로 기능하고 있다.

□ 청년을 잇다, '남원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 공유 오피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통해 남원의 청년들을 모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와 놀거리를 제공하는 청년문화협동조합이다.
 - (배경) 남원이라는 지방 소도시에 청년문화를 만들어 이어가고자 청년주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 (주요 내용) 문화 이벤트 기획,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으로 남원 지역의 청년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 (키워드) 청년, 공동체, 네트워킹, 문화, 일거리, 놀거리
- 고가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으며 지역에 활기를 부여했다.



□ 삶이 곧 작품이다, 농촌 어르신들의 작가 도전기 ‘촌티문학회’

- 농촌 어르신들 대상의 문해교육 및 문예창작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문해력 상승과 자긍심 고취로 삶의 질이 상승된 사례이다.
 - (배경) 충남대학교 문예창작교실의 시인과 수필가들이 모여 만든 촌티문학회는 2017년 스마일뱅크 농촌재능나눔사업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역량에 기초한 농촌 주민 대상 재능나눔 방안을 기획하였다.
 - (주요 내용) 문학회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글쓰기를 하면서 농촌 삶의 이야기를 담은 ‘촌티나게 살았소’를 발간, 졸업식과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 (키워드) 한글교실, 시·수필교실, 농촌문해교실, 농촌재능나눔
- 글쓰기 교실을 통해 각자의 삶을 말로 표현하고 그 속에 있는 슬픔들을 함께 나누며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였다.

□ 책을 벗 삼은 교육이 실현되는 곳 ‘고창 책마을해리’

-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책을 테마로 한 복합 교육 공간을 탄생시켜 마을 학교와 출판캠프 등 학생, 어르신들이 직접 책을 쓰고 펴낼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다.
 - (배경)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교육 기회와 노년층의 문해교육 기회를 주민들의 수요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활용과 접목하였다.
 - (주요 내용) 폐교 공간을 활용하여 활자 교육에서부터 출판까지 이어지는 마을학교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키워드) 책, 방과후학교, 마을학교, 평생교육
- 폐시설을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재생한 성공적 사례이며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뿐 아니라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안적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마을 활력을 ‘전남 영암구림공고 구림 휴(休)’

- 특성화고교의 취업률 하락과 학생 수 감소 등의 문제를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농촌 면 소재 학교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 (배경) 농촌 지역의 학생, 청년들의 도시 이주 증가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위기에 대하여, 면 단위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특화 학과(한옥학과)를 운영하여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 (주요 내용) 학생, 교사, 지역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 한옥 건축 및 보수, 목재가구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장학 사업을 수행하는 등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과의 연계 사업을 확대하였다.
 - (키워드) 농촌 특성화교육과정, 면 단위 학교 살리기, 학교협동조합, 사회적경제
-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주, 자립, 자치적인 조합 활동으로 복리 증진과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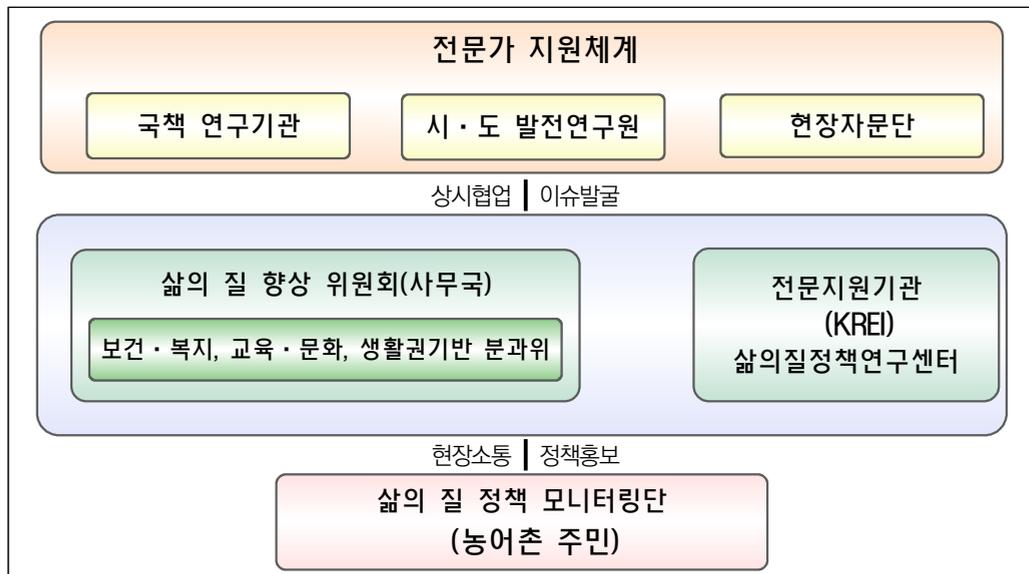
-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 3.4.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지원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개요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2015년도에 협약을 맺고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교사, 사회복지사, 공중보건의사, 구급대원 등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농촌 현장의 여론,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각 일원이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농촌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7개의 국책 연구원, 9개의 시·도 연구원,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현장자문단,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정책지원 네트워크 체계〉





❖ 주요 내용

▣ 현장자문단 운영 및 토론회 개최

○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및 배경	- 서비스 전달자 및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파악. 이를 연구에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제시 - '현장자문단' 조직을 구성하여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출 범	- 2015년 7월 21일 출범식(서울 양재동 aT 센터) - 정책 모니터링단(KREI 리포터)과 함께 현장네트워크 구성
조직구성	- 삶의 질 7대 정책 부문별 현장 전문가로 구성 - 보건·복지 14명, 교육 9명, 정주생활기반 4명, 경제활동·일자리 8명, 문화·여가 8명, 환경·경관 4명, 안전 6명
운영 시스템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운영
성과 관리	- 연구 자문 및 이슈 발굴

○ 현장토론회

- 일시: 2019년 7월 2일 (화) 14:00~17:00
-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호텔 스타볼룸
- 주최 및 주관: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주요 토론 내용〉

- '농촌공간계획', '농촌발전계획', '농촌협약' 등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대해 공론화하고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와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지자체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농촌공간계획과 농촌발전계획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각자 전문 분야에 따라 접근이 다르다. 농촌공간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농촌발전계획은 전략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되며, 단순히 연구를 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드는데 몰두하기보다는 합의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다.
- 지방이양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게 광의의 지침이 필요하다.
 -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침이 없어 시장이나 군수,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자연스레 마을가꾸기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해외의 경우 점차 도시를 축소해가는 추세로, 과소마을 및 10호 미만의 마을은 중심지나 거점 지역으로 흡수하며 마을을 통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통신 케이블을 걷어내고 그 자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농식품부 주도의 추진 방식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전체 마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 지방이양 사업이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큰 틀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재정 권한을 여전히 행안부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제약이 있다.
-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자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갈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조직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각 도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다. 시·도 단위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농촌개발사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이양으로 시·군 담당자, 센터장의 역할이 훨씬 강해지리라 예상하며, 때문에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해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 공동 연구 진행

- 정책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국책 및 시도연구원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에 대한 업무 협업 및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참여 연구기관〉

핵심 항목 점검부분	연구기관
2019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강원발전연구원
2019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충북연구원
2019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충남연구원
2019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전북연구원
2019 전라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광주전남연구원
2019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대구경북연구원
2019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경남발전연구원
2019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제주발전연구원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 개요

- 전문지원기관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보건·복지, 교육·문화, 생활권 기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각 분과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삶의 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조정,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등 분야별 토론·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2019년에는 보건·복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지원기관은 해당 분과위원회 논의 안건을 제시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19년에는 삶의 질 향상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 개최를 준비하였으며, 전문지원기관은 관련 논의 안건을 제시하는 등 운영을 지원하였다.

❖ 주요 내용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 일시: 2019년 9월
 -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전문지원기관 담당자
 - 논의 안건: 사회적 농업과 사회서비스 제도 연계 방안, 도농 의료격차 해소방안
 - 전문지원기관은 도·농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모델과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관련 안건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안건별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20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 주요 논의 안건은 제4차 기본계획,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이다.
- 전문지원기관은 제4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범부처적으로 향후 5년간 의료·복지 개선, 정주여건 조성 등 서비스 정책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최근 여건 변화로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 현장 수요와 통계자료 변동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에서 일부 항목 개선 및 생활 SOC 관련 항목 등을 신설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이 취약한 지역을 각종 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 주체 및 절차, 대상 정책 등 세부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 개요

-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를 겪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 농촌이 직면한 인구·경제·사회적 현황에 대하여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현실과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농촌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켜 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지자체 우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한다.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축적된 조사연구 내용,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 지자체 공무원, 지역 활동가, 농업·농촌관련 연구자에게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발간된 포스터는 각 시·군 삶의 질 정책 담당 부서, 공무원, 삶의 질 정책지원 연구네트워크(국책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현장자문단,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KREI 통신원과 리포터 등에게 배포한다.
- 2019년에는 5호를 시작으로 7호까지 발간하였다.
 - 1호: 농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2018.07)
 - 2호: 청년, 농촌에서 즐거운 삶을 꿈꾸다. (2018.08)
 - 3호: 없어서는 안될 농어촌 학교 (2018.10)
 - 4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서 시작한다. (2018.12)
 - 5호: 주민들은 농어촌에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2019.01)
 - 6호: 농촌 주민의 삶 터(據), 현재 주거 여건은 어떠한가? (2019.03)
 - 7호: 농어촌 공공서비스, 어떻게 제공되고 있을까? (2019.06)



❖ 주요 추진 내용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5호

- (제목) 주민들은 농어촌에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구성)
 -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 비교
 -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 개선되고 있는 농어촌의 정주여건
 -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큰 정주여건
 - 청년, 귀농인, 귀촌인 만족도가 낮은 정주여건
 -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농촌형 생활 SOC구축 사례
- (내용)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정리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에서 삶의 질과 정주여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지표를 제시하였다.
 - 주민들이 체감하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주관적 웰빙 지수’에서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은 7대 정책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중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주여건으로 ‘보건·복지’ 여건과 ‘경제활동·일자리’ 여건을 뽑았다.
 - 하지만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014년 조사결과와 2018년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문화·여가’ 부문과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만족도가 상승하여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격차도 큰 폭으로 줄었다.
 -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읍 지역과 면 지역의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6호

- (제목) 농촌 주민의 삶 터(據), 현재 주거 여건은 어떠한가?
- (구성)
 - 도시와 농촌의 주택 유형 변화
 - 농촌의 노후주택과 빈집 현황
 - 농촌 주택의 시설 및 주거 인프라 여건
 - 농촌 가옥의 물리적 특성과 증가하는 공폐가
 - 농촌 주거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
- (내용) 농촌 주민 생활의 기본 터전인 주거여건을 진단하고 농촌 주거의 취약성을 이슈별로 검토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농촌 주거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농촌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의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데 반해,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 중 대다수(60년대 이전 주택 87%, 70년대 주택91%)는 주택을 수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거 인프라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상수도과 난방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난방의 경우 농촌 주택은 주민 개인이 직접 조달해야 하는 기름(48.3%), 전기(13.7%), LPG(6.3%)에 의존하고 있어 농촌의 난방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또한 농촌에 방치된 빈집(공폐가)은 지역사회에 위생, 안전문제를 유발하면서, 농촌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읍·면)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향후 빈집으로 변하게 될 농촌 주택은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 농촌의 주거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방안을 수립하여 시급히 대응해야 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주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형 주거기준 마련으로 시·군 지자체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농촌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정책 실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7호

- (제목) 농어촌 공공서비스, 어떻게 제공되고 있을까?
- (구성)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측정 항목
 -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추이
 - 주목할 만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여건 변화 추이
 - 농어촌에서 최근 가장 많이 개선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 (내용)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파악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이 30% 미만인 시·군 지역 수가 2015년 45개에서 2018년 41개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상당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미달한 하위 시·군 지역이 고착화되어 있다.
 - 그 중에서 ‘진료서비스’, ‘영유아’, ‘초·중학교’, ‘상수도’, ‘난방’, ‘소방 출동’ 등 농어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항목들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공공서비스 핵심 부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 17개 항목 중 9개는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2개 항목(응급서비스, 노인), 교육여건 부문에서 2개 항목(초·중학교,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 2개 항목(상수도, 난방),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부문에서 각각 1개 항목(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 설비)이 전년도에 비해 더 높은 이행실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지원

❖ 개요

- OECD 농촌정책의 저변을 아시아 국가 및 시민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를 지원하였다.
 - 일시: 2019년 9월 24일(화) ~ 9월 26일(목)
 - 장소: 서울 프라자 호텔
- “농촌 삶의 질 향상(Delivering rural well-being)”을 주제로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원활한 컨퍼런스 진행을 위하여 한국 농식품부 및 OECD 사무국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행사를 지원하였다.

❖ 주요 내용

-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에서는 OECD 및 아시아 각국의 고위각료와 참석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농촌정책 3.0(Rural Policy 3.0)’과 ‘OECD 농촌정책 현장(OECD Rural Policy Principles)’ 공식 선포가 이루어졌다.
 - OECD 농촌정책이 지향해온 민·관의 협력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포용적 성장 등이 주요 아젠다로 다루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식과 확산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이 주관하여 이루어진 사전 컨퍼런스에서는 농촌 비즈니스 혁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포용적 성장, 환경·경관 관리 등의 한국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들에 대한 소개와 OECD 및 아시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전컨퍼런스는 ‘농촌 혁신과 삶의 질 향상’, ‘농촌 사회의 포용과 환경 관리’의 두 가지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 ‘농촌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의 세션 중 하나인 ‘농촌 서비스 전달을 위한 혁신적 접근’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상황에서 삶의 질 지속가능성 유지하기, 전자서비스, 공유서비스 및 기타 이머징 서비스 모델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다른 세션 ‘농촌비즈니스 기회와 삶의 질’에서는 시장기회와 도전과제, 정책 변



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와 메가트렌드의 맥락에서 살펴본 농촌 지역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 ‘농촌 사회의 포용과 환경 관리’의 첫 번째 세션 안건으로 제시된 ‘농촌의 포용 발전과 사회적경제’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적응을 통한 농촌 지역 포용 성장의 촉진과 젠더 포용 및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농촌 환경 관리와 경관 보전’세션에서는 환경적 위험 관리와 기후 변화, 농촌 환경 관리를 위한 전략적 기획이 주요 안건이었다.
- OECD가 주관한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농촌의 인구·기술·고용·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농촌 정책의 과제 및 접근방식이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였다.
 - 메인 컨퍼런스는 ‘혁신, 기술변화, 그리고 삶의 질’, ‘모든 세대를 위한 농촌 커뮤니티’, ‘농촌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총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 ‘혁신, 기술변화, 그리고 삶의 질’ 주제 중 ‘기술변화: 우리의 삶과 일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세션에서는 농촌 지역의 미래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을 개관하고, 기술이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기술 사용의 적응에 있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농촌의 혁신 생태계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구조화’ 세션에서는 글로벌 벨류체인 맥락에서의 농촌 지역 혁신과 농촌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 ‘모든 세대를 위한 농촌 커뮤니티’ 주제의 세션 중 첫 번째인 ‘고령자 친화형 농촌 커뮤니티’에서는 농촌 지역 고령 인구를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다른 세션인 ‘청년을 위한 농촌 매력 증진 및 역량 향상’에서는 농촌 지역에 젊은 층을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 마지막 주제인 ‘농촌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방향’의 ‘기후 변화 대응과 위험 관리’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농촌 지역에서의 위험 관리와 기후 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농촌 산업구조의 변화와 순환경제’세션에서는 산업 전환에서의 기회와 도전과제, 저탄소 경제로의 이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Ideas Factory/open space에서는 농촌 비즈니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확산을 주제로 참여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종류의 도전

과제와 구체적인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전라북도 완주군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농촌 비즈니스에 대한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 동향과 소비자의 관심 활용 방식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주요 내용
9월 24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1[사전 컨퍼런스 및 메인 컨퍼런스] - 08:30~09:00 / 환영사·컨퍼런스 일정 및 관련사항 안내 - 09:00~10:30 / [사전 컨퍼런스] 주제1: 농촌 혁신과 삶의 질 향상 - 10:40~12:10 / [사전 컨퍼런스] 주제2: 농촌 사회의 포용과 환경 관리 - 13:30~13:50 / 개회사 및 OECD 농촌정책 3.0 발표 - 13:50~14:10 / 기조연설 - 14:10~14:40 / 전체세션: OECD 농촌정책 현장 - 15:10~16:40 / [메인 컨퍼런스] 주제1: 혁신, 기술변화, 그리고 삶의 질 - 17:10~17:55 / [메인 컨퍼런스] 주제1 전체토의: 혁신, 기술변화 그리고 삶의 질
9월 25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2[메인 컨퍼런스] - 08:30~10:00 / 주제2: 모든 세대를 위한 농촌 커뮤니티 - 10:00~11:30 / 주제3: 농촌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방향 - 12:00~12:45 / 전체패널: 모든 연령을 위한 농촌 커뮤니티 - 12:45~13:30 / 전체패널: 농촌 저탄소 경제로의 공정한 이행 - 15:00~17:00 / Ideas factory/open space 농촌 비즈니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확산 - 17:15~18:00 / 폐회식
9월 26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3 [필드트립] - 08:00~22:30 / 완주 방문(커뮤니티 비즈니스 - 로컬푸드)